

#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및 시사점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jeanlim@kir.re.kr

## 1.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 유입액이 금년 3분기 신고·도착 기준 모두 역대 3분기(누적기준)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하였다. 신고 기준으로는 2013년 3분기 누적 유입액인 107.5억 달러 대비 37.9% 늘어난 148.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도착 기준으로도 전년 동기 65.1억 달러 대비 무려 50.1% 늘어난 97.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DI가 2010년에는 72.7억 달러, 2011년에는 75.8억 달러, 2012년에는 112.0억 달러, 2013년에는 107.5억 달러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2014년중 FDI가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2013년 FDI가 신고금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10.7% 감소하고 도착금액 기준으로도 전년대비 9.2% 감소하면서 향후 FDI 성장세가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2014년 들어 FDI가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이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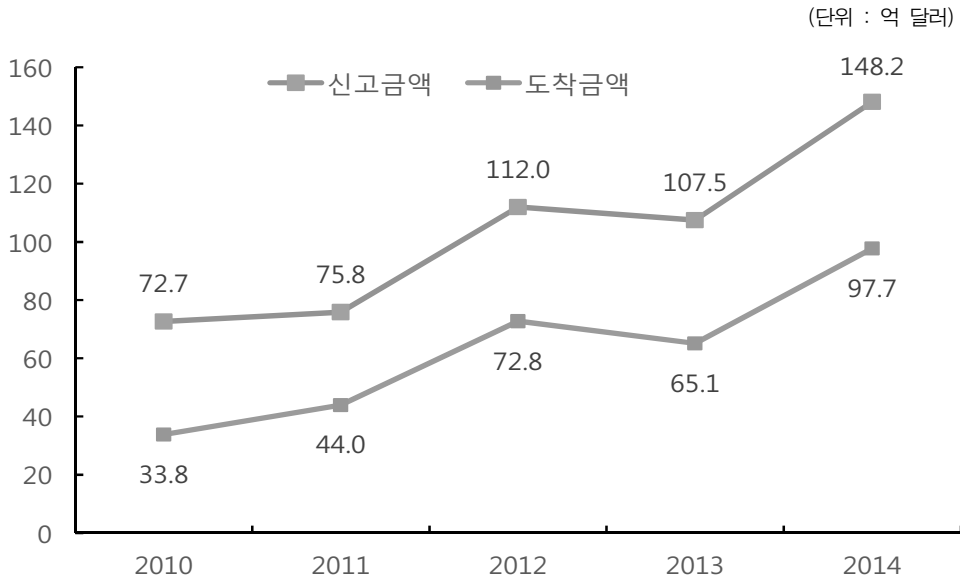
본 원고는 임진(2014)을 일부 수정하였음을 밝힙니다. 또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박사

- 최근연구 :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2014) 등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2014년말에 이르면 FDI 유입액은 연간 목표액인 170억 달러를 무난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그림 1> 최근 5년간 1/4~3/4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업종별로 살펴보면, 2014년 1/4~3/4분기 중 제조업으로는 60.7억 달러 유입되어 전년동기 대비 101.4% 증가하였고 서비스업으로도 86.0억 달러 유입되어 전년동기 대비 11.4% 증가하였다. 특히 제조업 중에서 부품소재가 전년 동기 대비 74.6% 늘어난 34.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제조업이 FDI 증가를 견인한 점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별로 보면 우리나라에 대해 투자를 하는 국가들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FDI 유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일본이 전년대비 16.6% 감소한 반면, 중화권은 89.9% 증가, EU는 84.1% 증가, 미국은 6.4% 증가하였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3분기 누적 신고금액이 10.3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30.4% 증가하였다. 또한 네덜란드는 19.3억 달러, 룩셈부르크는 19.0억 달러 등 여러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다.

## 2.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FDI는 공장설립 등 투자 자체로 인한 직접경로 뿐만 아니라, 고용유발, 기술이전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 간접경로를 통해서도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Blomstrom et al.(1994), Borensztein et al.(1998) 등 기존연구에 따르면 FDI 유입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가진다.

우선 FDI 확대로 외국자본이 국내로 유입되면 국내 자본스톡이 늘어나게 된다. 한국은행(2008.4월, 조사통계월보)의 연구에 따르면 FDI 유입액이 1% 증가할 때 설비투자는 0.0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내투자가 크지 않고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등 해외투자 또한 확대되면서 국내 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FDI 확대는 국내기업의 미흡한 설비투자를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신용도가 높은 외국기업이 필요 자본을 국내에서 대규모로 조달하려고 하면 국내 금리상승으로 국내기업의 조달비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 이 경우에는 FDI가 국내기업의 투자를 구축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FDI는 고용확대에도 도움을 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되고,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고용창출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상당한 유휴인력이 존재한다.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업자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원하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60세 이상 고령층, 가정주부, 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인구 규모도 상당하다. 따라서 FDI를 통한 고용확대는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다국적 기업의 임금수준이 평균적인 국내기업보다 더 높다고 한다면 외국인투자확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는 대졸이상 고학력자들의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의 질적 미스매치를 해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FDI는 기술이전 등을 통한 생산성 개선에도 기여를 한다. 자본재 도입을 통한 설비 도입, 채용을 통한 신기술 습득 등은 직·간접적으로 국내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물론 기술이전 등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생산성 제고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인적자원의 높은 교육수준을 감안할 때 FDI를 통한 인적·물적 생산성 제고 효과는 상당히 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

이와 같은 FDI의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우리 정부는 FDI를 확대하고자 2013년 2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의계약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의계약제도를 정비하였으며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업종에 정보·통신 분야 서비스업을 추가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1월 1일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한 데 이어, 1월 9일에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방안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규칙에 대한 영문번역 서비스를 확대하고, 전자금융 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자료제출을 최대한 간소화하여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외국기업과 국내중소기업간 합작투자도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근 주요 아시아 신흥국들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DI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에 자유무역 시험 지구를 지정(13.9월)하고 동 지역 내에서 외국인투자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였다. 인도는 항구, 식품가공, B2B 전자상거래에 대한 FDI를 100% 까지 허용 (12.4월)하고 일부 농업부문에 대해서도 100% 외국인자본소유 기업설립을 허용 (12.5월)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도 토지수용법 개정으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추진 (12.1월)하고 신 투자계획안 및 광업법 시행세칙 제정을 통해 FDI 투자절차를 간소화 (12.2월)하였다.

따라서 FDI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FDI 유입액이 국가별로는 일본,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규모별로는 대형투자 분야에서 두드러진 점을 감안할 때 FDI가 특정국으로부터 또는 특정산업에 편중되는 현상을 완화시켜 보다 광범위하게 유입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4월 한·호주 FTA 체결을 계기로 국내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뿐만 아니라, 호주기업의 우리나라 투자도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호주는 1차와 3차 산업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차 산업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양국이 상호 보완적인 직접투자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FDI 유치 노력이 Greenfield형 제조업 대형투자에 대해 조세, 입지 등에서의 인센티브 제공 위주이었으나, 앞으로는 규제개혁을 통해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SW, 물류, 법률 등 유망 서비스분야에서도 FDI가 확대되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규제총량제 도입, 규제개혁 원칙 정립 등을 통해 적극적인 규제 개혁에 나서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개혁이 국내기업의 투자 활성화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4. 서울을 금융 중심지로

그동안 금융 산업은 제조업 중심의 실물 경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을 조달하는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수출제조업 중심 성장모형의 한계,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 신 성장산업 육성 필요성 증대 등 새로운 환경변화로 인해 금융 산업 자체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성장산업이라는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금융허브를 추진하고 있다. 사실 서울시의 금융 중심지 추진은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2002년 서울시는 서울을 동아시아 금융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 및 국제기구 유치에 노력하였다. 중앙정부도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제시한 이후, 2005~08년 금융허브 기반 구축 추진, 2007년 금융 중심지 조성추진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2008년과 11년 금융 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2009년 금융 중심지 지정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동아시아 금융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서울이 동아시아 금융 중심지가 되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도시인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도쿄 등과 비교해 볼 때, 협소한 국내 금융시장, 금융규제 등으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이 낮은 상태이다. 또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공공 금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서울시의 금융 중심지 조성 추진동력 확보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FDI를 통해 서울을 동아시아 금융 중심지로 발전시키려는 과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중국 위안화 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안화 관련 금융시장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고 중국과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위안화 거래가 늘면서 위안화 관련 금융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의 알리페이 (Alipay)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상이 점점 높아져가는 위안화를 적극 이용하여 외국인 투자자금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서울을 동아시아 금융 중심지로 만들어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1. 임진, “최근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포커스, 2014.4월
2.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보도자료, 2014.1월
3. Blomstrom, Magnus, Robert E. Lipsey, and Mario Zejan. “What explains developing country growth? “, No. W413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94.
4. Borensztein, Eduardo, Jose De Gregorio, and Jong-Wha Lee. "How does foreign direct investment affect economic growth?."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5.1, 1998.